

전력망 건설 지연 단 · 중장기 대응전략

1. 추진배경

- 첨단산업 전력수요·재생e 발전 연계 물량 증가로 안정적 전력망 역할 증대
- 전력망 건설지연 대응방안 수립으로 산업부 우려 불식 및 국민 설득 필요

2. 추진방향

- (발전제약 해소) 재무악화 우려 종합대응책 마련, 장·단기 송전능력 확대
 - (법령 제·개정) 지역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·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
 - (시공기간 단축) 기존 방식으로 급증 건설물량 소화 불가로 대응방안 시급
- ※ 국가 에너지믹스 및 첨단전력산업 적기·안정적 인프라 구축계획 이행 必

3. 대응전략

- 단기(~'27년) : 단기 송전능력 확대 추진 및 신속한 법적 기반 마련
 - (발전제약 해소) NWAs 기술 적용 확대 및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
 - 계통안정화용 ESS 및 유연송전설비 적용 통한 단기설비보강 대책 추진
 - 광역정전 예방 및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 제약 완화·송전용량 확보 도모
 - (법령 제·개정) 전력망혁신법 제정 및 전원촉진법 개정 적극 추진
 - 전력망혁신위원회 설치로 인허가 관련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구축 실시
 -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제화로 투명성·공정성 확보 및 지자체 비협조 대응
- 중장기('28년~) : 선로용량 확보 및 건설물량 확대 계획 적극 이행
 - (발전제약 해소) 동적 송전용량 산정기술 적용 및 신뢰도 유지 기준 완화
 - AI·빅데이터 활용 선로용량 한계치까지 허용량 증대 동적용량 방식 도입
 - '송전선로 이중고장 전제'→'단일고장 반영 방식' 변경('30년 6.6GW 완화)
 - (시공기간 단축) 신규 장비 도입 유도 및 해외 인력(송전 전기원) 확보
 - 신규 터널 굴착장비 도입 유도 품셈 개정 및 터널 굴착 시공 속도 향상
 -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대상 조정(법무부 협의), 비자제도 개선 시행 추진

4. 향후계획

-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사 다짐대회 개최 : 12월 16일
- '전력망 건설 지연 대응전략' 산업부·국회 대상 CEO 보고 : 12월 30일